

“청소년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모든 이에게 정치참여의 권리를!”

- 선거연령 하향 촉구 및 정치활동 연령제한 폐지 입법 발의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2017년 11월 29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문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언론홍보단

- ◎ 진행 순서
- _ 발의 취지 소개 (표창원 의원)
 - _ 청소년 당사자 발언 (김윤송)
 - _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입법의 정당성 설명 (민변 황준협 변호사)
 - _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입법 촉구 발언 (최은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대표)

청소년 인권, 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youthact.kr

이메일 youthact2018@gmail.com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 나가기 위해 청소년/교육/인권/시민사회 등 전국 4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입니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과 함께 오는 29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법 및 선거법 상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연령제한 폐지 입법 발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정당가입 등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당법 제 22조 개정안과,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불법화하고 있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취지로 선거법 제 60조 등의 개정안, 주민투표권 및 조례제정과 개폐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을 행사하는 연령을 만 16세 기준으로 하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기자회견 후 발의하였습니다.
3. 본 기자회견에서 표창원 의원은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등의 청소년들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뒤질 게 없다. 작년 겨울 촛불의 주축에 청소년이 있었고, 4.19 혁명과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도 청소년들이 있었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너무나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자유와 권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첨단 교육이라 생각한다.”라며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4. 이어서 발언한 청소년 김윤송 님은 “과거 흑인은 뇌가 작아서 참정권을 주면 안 된다고 했던 논리, 여성은 남편 따라 투표할 것으로 투표해선 안 된다는 논리가 지금은 터무니없게 여겨진다. 청소년 참정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를 비롯한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황준협 변호사는 “영국 및 독일, 프랑스, 호주에서도 법률에서 정당가입 연령을 정하지 아니하고, 각 당의 당헌 및 당규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당함을 설명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최은순 상임대표는 “‘어려서 안 된다’고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는 자녀 등 청소년을 소유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세계적으로도 참정권이 확대되는 데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한다면 ‘꼰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5. 현행 정당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선거권 부여와 관계없이 더 폭넓게 가능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도 2012년,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넓혀서 국민의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 이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는 일찍부터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당은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로서 그 구성원의 자격은 법률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6.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여, 19세 미만 자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19세 미만 자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청소년에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 법상 금지해야 할 선거운동은 청소년과 성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충분합니다. ▲ 외국의 경우에도 선거운동에 있어 성년자와 청소년을 달리 규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7.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권리는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또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해당 권리를 나이를 이유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정당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참여 권리 보장은 정당하고 시급합니다. 이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정당법과 선거법의 개정을 개정하여 연령 제한 기준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9세로, 현행 주민투표법에서는 조례제정과 개폐 청구권 및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 또한 만 19세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주민투표권 및 조례제정과 개폐 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법률안이 계류중이기는 하나, 만 18세 기준으로는 청소년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 및 조례제정과 개폐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연령을 최소한 만 16세 기준으로 하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본 기자회견과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안 등에 관해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문의 : 언론홍보단 010-9945-9517, youthact2018@gmail.com)

[붙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및 소속단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1. 제정연대 소개

1) 결성 취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한다.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정치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청소년 정책은 왜 다들 통제 중심인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에 묻는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입니까?”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촛불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2017년 9월 2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다.

2) 주요 목표

“2018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자!”
“청소년인권,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청소년, 입시공부가 아닌 정치를 통해 삶을 바꾸자

청소년에게 선거권·피선거권·정치표현의 자유·정당활동의 권리·주민발의권을 보장하라

만18세는 너무 늦다, 청소년을 유권자로

선거/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18세 미만으로 하향하라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 벗어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목록과 인권보장체계를 담은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학교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학생인권침해행위 명시,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육청에 권리회복기구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3) 왜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르나?

- ‘광장의 시민’, ‘광장의 동료’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을 기억한다.
- 청소년 인권을 억압하고 청소년을 시민에서 배제해온 현실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한 청소년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일부 청소년의 폭력사건이 청소년인권을 유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 촛불에 함께했고 촛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촛불에 함께했던 청소년들의 외침에 ‘촛불청소년인권법’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의 구체적 내용

1)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 문제점

- 촛불의 힘으로 바뀐 정권 하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은 투표조차 할 수 없다.
- 세계 대다수 나라가 18세 투표권을 선택했고,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16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한 정치선진국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후진적이다.
- 만18세 투표권을 공약한 정권이 들어섰지만, 정치적 거래로 그조차도 차일피일 미뤄질 우려가 있다.
- 만18세로 투표연령이 낮아져도 청소년의 극히 일부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만18세는 너무 늦다.
- 청소년 참정권이 없기에 정치인들이 청소년 인권에 무관심하다.
-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모이고 정당활동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 청소년도 자기 삶에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 입시공부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 시기는 민주주의를 단지 훈련하는 나이가 아니다.
- 만18세 너무 늦다. 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준다. 만18세 선거권을 넘어 더 많은 참정권을 확보한다.

청소년 인권, 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youthact.kr

이메일 youthact2018@gmail.com

-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의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2018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청소년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을 개정하라!
- 선거권/피선거권/주민발의/주민투표 연령을 만18세보다 더 낮추어 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라!

2)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 문제점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 학교, 학원, 복지시설, 쉼터, 알바현장, 지역사회 등에서 학대, 성폭력, 착취, 모욕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보호막은 취약하다.
- 어린이·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으로 학대수준이다. 놀 권리, 쉼 권리, 사회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빼앗기고 있다.
- 기존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통제 위주의 내용만 담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비준(1991년)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관통하는 통합법 하나 없다. 담당부처가 산재해 있어 통합적 정책이 부재하다.

¶ 우리의 목표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 벗어나자.
-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사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 있는 나라, 어린이·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의 기본이 인권이 되는 나라를 만든다.
- 어린이·청소년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고, 소수자인 어린이·청소년이 차별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공약이 헛된 약속이나 허울뿐인 약속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라!
- 어린이·청소년의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권 목록을 밝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
- 폭력, 착취, 차별로 고통받는 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보호자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난민청소년, 청소년 알바노동자, 시설거주 청소년 등
- 인권보장체계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핵심부처 지정,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 의무, 인권영향평가 도입, 권리회복기구 설치, 피해자 지원책 등

3) 학생인권법

¶ 문제점

- 현장실습생의 자살, 여학생 성폭력, 교사에 의한 학대·폭행, 과도한 복장·소지품 단속, 촛불집회 참여 제지, 보충·야자 강요 등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 학생회의 법적 지위가 허약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는 참여조차 할 수 없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단 네 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수준이 더욱 열악하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조례의 법적 지위가 약하다 보니 위반하는 학교들이 많다.
- 학생·청소년 인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지방의회와 교육청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등 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로막히고 있다.

¶ 우리의 목표

청소년 인권, 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youthact.kr

이메일 youthact2018@gmail.com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든다.

·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필요하다. 학생에게 시민권을 보장하자.
·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법률로!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인권을 누리고 인권의 가치를 익힐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든다.

·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 공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힘쓴다.

¶ 우리의 요구

· 학생인권 목록 및 학생인권 침해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라! : 체벌, 두발복장검사, 소지품검사, 차별행위, 보충학습강요, 서약 강요 등

· 학교운영 및 학칙 제·개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제도 마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학칙 제·개정시 학생총회 동의절차 명시

· 모든 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회복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설치, 구제절차 명시 등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여단체(2017.11.27 현재 353개 단체 가입, 굵은 표시는 연대체)

경남교육연대(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김해교육연대, 마산YMCA, 민주노총경남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지부, 전국교수노조부산울산경남지부, 전교조경남지부,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경남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진주교육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 **경남청소년네트워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밀양지부, 청소년바보회) / **경북교육연대**(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경북도당,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중연합당경북도당, 전농경북도연맹, 전교조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북교육청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대경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 /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 교육공동체 나다 / 교육공동체 벗 / 광주인권지기 활짝 / 녹색당 /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대전YMCA,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 투명가방끈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대전지부, 전북지부) / 민주청소년연대 / 사단법인 두루 / 사)들꽃청소년세상 /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 사회변혁노동자당 /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 **서울교육단체협의회**(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사학올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참교육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크레파스원정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 어린이문화연대 / 어린이책시민연대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 **울산시민연대** / **울산성서의전화** / **울산인권운동연대** / **울산청소년첫걸음** / **울산풀뿌리주민연대**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 이리여고 인권동아리 마중물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정책연구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교조 대구지부 / 전교조 세종지부 / 전교조 인천지부 / 전교조 전남지부 / 전라북도청소년행동 동행 /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북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 **전북인권교육센터** / **전북인권교육연구회** /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정의당예비당원협의회 '허들'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광양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김제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김해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나주시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 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 참교육학부모회 상주시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남부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동북부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서부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안양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영암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 참교육학부모회 의왕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 참교육학부모회 전주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천안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파주시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흥성지회 / 참교육학부모회 화순지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좌파 / 청년참여연대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띠동 /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 청소년주권회의 / 청소년페미니즘모임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강원연대**(강릉시민행동,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시노인요양원지부,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화력지부, 강원영동학교인권교육연구회, 강원영서학교인권교육연구회, 공공운수노조금강고속지회, 내일을여는속초시민연대, 노동당 강원도당, 녹색당강원도당, 더불어민주당동해삼척지역위원회, 동해시민공동행동, 동해시민공동행동모임, 민주노총강릉일반노동조합, 민주노총강릉지역지부, 민주노총강릉영동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표지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동해삼척지역지부, 민주노총속초지역지부,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 민중당동해삼척지역위원회, 변혁당강원도당, (사)속초여성인권센터, 삼척학습실천연대, 속초경제정의실천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속초여자고등학교학생회, 인제군실악산배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도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속초시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강원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홍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농민회강원도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속초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노조속초의료원지부, 정의당강릉시위원회, 정의당강원도당, 청소년의행동하는양심, 춘천시민연대, 춘천평화나비,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흥천골프장대책위, 흥천군농민회,

청소년 인권, 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youthact.kr

이메일 youthact2018@gmail.com

.....
홍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 홍천군여성농민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기연대**(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중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인권교육 온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학부모회)/ **촛불청소년인권법부산제정연대**(꽃길메이커, 나래(온새미학교, 우다다학교, 참빛학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겨레하나, 금샘마을공동체, 나눔수레, 노동당부산시당, 녹색당부산시당, 맨발동무도서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다행복학교, 학부모네트워크, 부산민예총, 부산사회복지연대,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교육을위한학부모연대, 부산참여자치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울산지부, 정의당 부산시당,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창조어머니회, 책과아이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살림, 햇살나무도서관, 희망세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주제정연대**(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충북연대**(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노동당충북도당/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민중당충북도당/보은민들레희망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생태교육연구소'터'/온갖문제연구소/우리의소원은/이주민노동인권센터/인권연대습/전국공무원노조교육청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북지부/전국공무원노조충북교육청지부/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전국교수노조 충북지부/전국교직원노조충북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정의당충북도당/청주YWCA Y-틴협의회/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도시산업선교회/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YMCA/충북교육발전소/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사랑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충청평화나비네트워크/태고종노동인권위원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충남청소년인권+**(노동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민주노총충남세종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서산인권모임 꿈틀,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수나로 충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전농충남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충남지부, 청양시민연대, 홍성YMCA) / **충북교육연대**(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 노동당충북도당, 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 생태교육연구소 '터', 전공교육청본부충북교육청지부, 전교조충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충북본부, 전국교수노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북도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북지부, 정의당충북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장애인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여고 자율동아리 MeForYou**/ **피스모모(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한국게이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인권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을만드는법**/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